

투표불참 유권자 집단과 한국 정당체제

서복경 | 서강대학교

| 논문요약 |

본 논문은 2007년 대선 및 2008년 총선에서 나타난 투표불참 유권자 집단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논문의 주된 관심은 '왜 투표하지 않았는가'가 아니라 '누가 투표하지 않는가'에 관한 문제다. 기존연구들은 정당체제의 대표성과 투표참여의 관계에 관해 두 가지 가설을 발전시켜 왔다. 한 가지는 투표참여 집단과 투표불참 집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면, 투표불참이 정당체제의 대표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른 한 가지 입장은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사회인구학적 차이가 존재한다면, 정당체제의 대표성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표되지 않는 집단의 정치적 선호에 대한 배제나 억압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논문은 최근 한국의 전국적 선거에서 급격한 투표율 하락현상이 민주주의 제도화의 일상적 효과범주에서 파악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당체제의 대표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주의 문제인지에 관심을 갖는다.

지금까지 한국유권자의 투표불참에 관한 연구들에서 유의미했던 변인들은 교육, 연령, 지역 등의 변수였던 반면 소득, 직업, 계층적 지위 등의 변수는 약하거나 일관되지 않은 경향을 나타냈다. 논문은 먼저 집합데이터를 사용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세입액과 투표율 하락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세입액이 낮은 자치구일수록 16~17대 대선 투표율 하락폭과 17~18대 총선의 투표율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났으며, 전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 자치구 세입이 낮은 선거구일수록 투표율 하락이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논문은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조사된 총 5,443개의 표본(불참집단 1,569개)을 사용하여 성별, 연령, 학력, 소득, 직업의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투표참여를 기준으로 볼 때 소득변수는 성, 연령, 학력변수를 통제한 뒤에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소득이 낮을수록 투표불참 가능성도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최소한 17대 대선의 결과를 토대로 할 때, 현재의 정당체제는 소득에 따른 사회계층 스펙트럼을 불균등하게 대표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주제어 | 투표참여, 투표불참, 기권, 정당체제의 대표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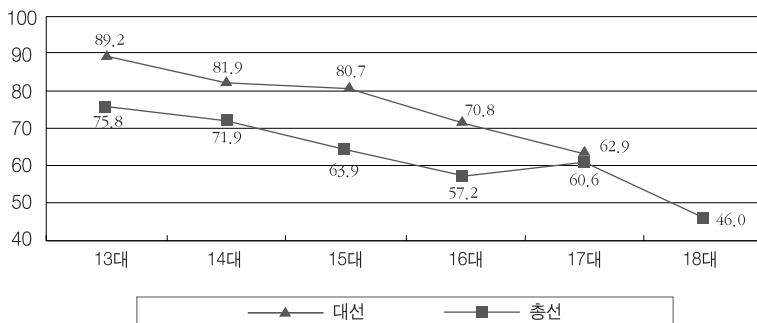
I. 투표불참 유권자 집단과 정당체제의 기반

“어떤 정치체제도 100%의 정치참여를 달성할 수는 없다. 하지만 모든 정황을 참작하더라도, 미국의 투표불참 규모는 너무 거대해서 통상 인용되는 심리적이고 교육적인 변인을 넘어서는 특별한 설명을 필요로 한다(E. E. Schattschneider 1975, 96).”

본 논문은 2007년 대선 및 2008년 총선에서 나타난 투표불참 유권자 집단의 성격을 추적함으로써, 현재 한국 정당체제가 포괄하고 있는 혹은 배제하고 있는 사회적 기반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주된 관심은 투표참여 유권자 집단과 불참 유권자 집단이 사회경제적인 차이를 갖는지, 또 그 차이가 정당체제의 성격과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 여부이므로, 투표참여 연구의 계보에서 보면 다소 고전적인 사회학적 접근에 해당한다 하겠다.

본 논문이 ‘왜’ 투표에 불참했는가에 앞서 투표불참자가 과연 ‘누구’인지에 주된 관심을 갖는 것은, 1차적으로 17대 대통령 선거와 18대 국회의원 선거의 기록적인 투표율 때문이다. 63%와 46.1%. ‘모든 정황을 참작하더라도 … 특별한 설명이 필요한’ 현상이다.

〈그림 1〉 역대 선거 투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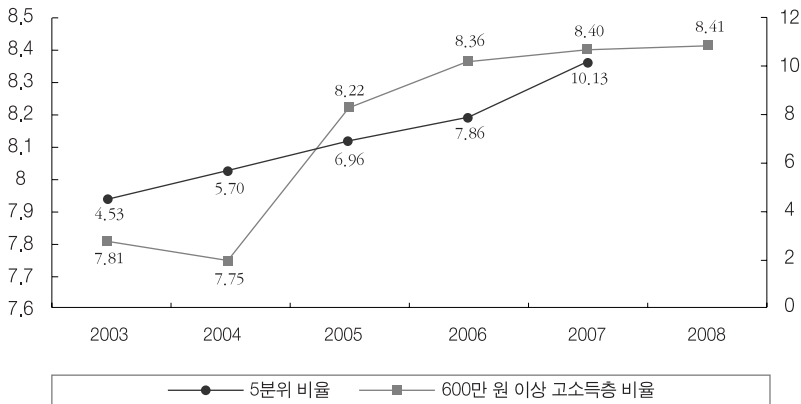
18대 총선 투표율 46.1%는 17대 총선 투표율보다 14.5%가 하락한 것이다. 불과 4년 만에 투표유권자의 1/4 규모의 유권자가 투표불참을 선택했다면, ‘투표 유권자 집단과 투표불참 유권자 집단의 동일선호 가정’은 한국적 맥락에 적용되기 어렵거나, 적용될 수 있다고 해도 한국 정당체제의 성격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크다는 판단이다.

예컨대, 미국 선거를 대상으로 한 테익세이라(Teixeira 1992)나 베넷과 레스닉(Bennet and Resnick 1990) 등의 연구는 대상 선거에서 투표에 불참했던 미국유권자들의 선호와 참여 유권자들의 선호가 선거결과를 가를 정도의 유의미한 차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런 연구들은 투표불참자가 선거에 임할 경우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구성된 정당체제가 충분한 대안집합이 되며, 양 정당이 불참자에게 있어 구별되는 정치적 선택지로 기능한다는 가정에 입각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하지 않았더라도 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지지선호를 그대로 시뮬레이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불참자에게 기성의 두 정당이 무차별적이라면, 주어진 정당체제 안에서 차별적인 선택지가 없음으로 해서 선거 관심도가 낮아지고 그로 인해 투표불참을 선택한 것이라면, 그리고 그 유권자 집단이 주어진 대안집합에 대한 선호에서는 투표유권자 집단과 차이가 없을지라도 특정 사회인구학적 집단의 구성원들이라면 문제는 달라진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특히 선거를 매개로 한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유권자의 선호란 항시 주어진 정당체제를 전제로 한다. 하지만 누구를 지지하는가에 대한 선호가 그 정당체제와 유권자의 관계에 대해 말해 줄 수 있는 것은 극히 빈약할 때가 많다. 주어진 정당대안 속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선호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무차별적인 상황에서 투표불참을 선택한 유권자 집단이 특정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다면, ‘왜’를 묻기 전에 ‘누구’ 인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문조사 응답자에게 묻기 이전에 정당체제 차원에서 물어야 할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본 논문은 17대 대선과 18대 총선에서 투표불참을 선택한 유권자 집단이 투표를 선택한 유권자 집단과 구별되는 사회인구학적 배경을 가질 것이라는 가정하에, 집합자료와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경험적 검증을 시도하였다.

지금까지 한국 선거에서 선거불참을 소재로, 유권자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그림 2〉 소득 양극화 지표(2003-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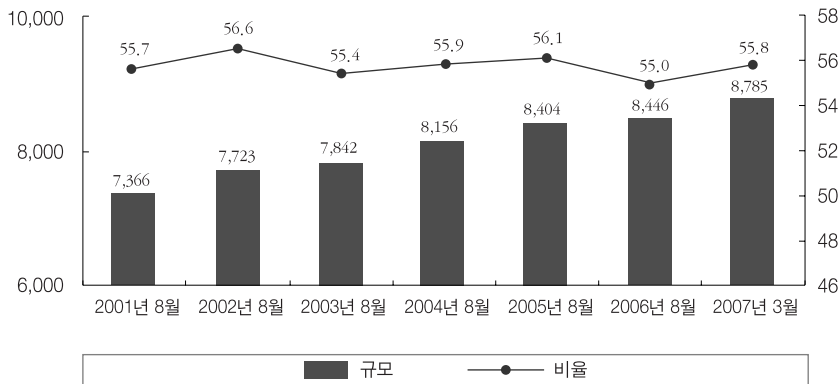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제공 자료

한 경험연구들이 밝혀낸 유의미한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은, 지역, 연령, 교육 변인 정도인 반면, 소득이나 직업 등 보다 직접적인 사회경제적 변인들의 영향력은 약하거나 일관되지 않았다. 이런 결과는 한편으로 소위 지역정당체제나 지난 선거에서 부각되었던 세대효과 등의 영향력에 압도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런 결과는 투표불참과 사회인구학적 변인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충분한 규모의 설문조사 데이터가 부족했던 이유에서도 기인했다. 본 연구 또한 이런 한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다.¹⁾ 하지만 이런 한계를 인정하 속에서, 모든 변수를 통제하고도 사회경제적 변인이 얼마나 설명력을 갖는가를 분석하는 엄밀함보다 사회경제적 변인, 특히 직업과 소득 등 사회 계층 변인의 잠재적 설명력을 모색하는 단순한 접근을 취하고자 한다.

1) 데이터의 한계에 관한 한, 필자는 5,443개의 표본과 투표참여, 지역, 성, 연령, 학력, 소득, 직업별 대표성이 높은 17대 대통령 선거 사전 유권자 조사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행운을 얻었다. 조건 없이 연구 자료를 제공해 주신 YTN 조승호 차장님과, 애써주신 동아시아연구원 정한울 여론분석센터 부소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림 3〉 비정규직 규모와 비율(2001-2007)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2007.3); 김유선 2007, p.3 인용

이렇게 접근하는 이유는 본 논문의 두 번째 가정, 짧은 시간 안에 대규모 유권자의 투표불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큰 잠재적 변인으로,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각종 거시경제 지표와 고용지표들로 확인되는 고용구조 변화와 소득 양극화 현상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2003년 이후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국가구 대상(농어민 가구 제외) 소득 5분위 배율 지수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2008년 기준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격차는 8.41배에 이르고, 월 소득 600만 원 이상 고소득층 비율은 2007년 기준 10.13%에 이르렀다.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비율은 55%를 넘어선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정규직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이며, 2007년 기준 법정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94.5%가 비정규직 노동자다. 전체 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법정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비율은 2001년 8월 4.4%에서 2006년 8월 9.4%, 2007년 3월 12.2%로 매년 빠르게 늘어간다(김유선 2007).

시장에서 유권자의 객관적 존재조건이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은, 정치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고 있는가? 적어도 지금까지 개별유권자 설문조사 데이터

〈표 1〉 차기정부 국정과제에 관한 17대 대선 이전 패널조사 결과

차기정부 국정과제	1차	2차	3차	4차
경제양극화	43.6	37.9	37.7	38.8
경제성장	28.7	33.6	33.2	32.8
삶의 질 개선	7.9	6.8	7.6	6.7
정치개혁	6.2	5.0	4.5	6.2
국제경쟁력 강화	5.2	6.4	5.1	5.6
국민통합	4.2	3.8	4.0	4.5
남북관계 개선	3.2	4.0	4.3	4.1
국가안보 강화	-	1.4	1.0	0.9
기타	0.7	0.8	1.7	0.3
모름/무응답	0.2	0.3	0.8	0.1

*출처: 정한울 (2008), 〈표 1〉 인용

들은 지지정당이나 투표후보를 결정하는 데 소득이나 직업 등 사회계층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드러내지 않았다. 이런 결과들을 통해, 시장에서의 존재조건과 선거에서의 정치선호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단절되어 있다고 해석해도 좋은 것일까?

〈표 1〉은 17대 대선에 앞서 진행된 한 패널조사에서, 차기정부 국정과제의 우선순위를 묻는 조사를 4차례에 걸쳐 시행한 결과다. 응답자들은 경제성장을 중요하게 고려했음에도, 4차례 모두 일관되게 경제양극화 해결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꼽았다. 적어도 정책선호에 있어서는 시장의 상황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의 〈표 2〉에서 시장상황을 반영한 정책선호가 지지후보 결정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응답자들은 경제양극화 완화를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꼽았고, 그 과제를 가장 잘 수행할 후보로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를 가장 다수가 지목했으며, 실제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의 결과는 조사결과와 일관되게 나타났다. 패널의 구성이 현재 한국사회의 구성적 특징을 제대로 대표했다면, 정규직 임금의 절반 수준을 받고 있는 55%가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 다수도 경제 양극화를

〈표 2〉 과제별 가장 잘할 것 같은 후보(4차 조사 결과, %)

〈문14〉 다음 중에서 차기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권영길	문국현	이명박	정동영	이인제	이회창	다른후보	없다	모름/무응답	Total
국민통합	3.0	8.0	33.0	29.0	1.0	15.0		10.0	1.0	100.0
경제적양극화완화	7.7	16.3	37.7	12.5	1.1	15.9	.4	6.5	2.0	100.0
남북관계개선	2.2	2.2	16.7	57.8	2.2	10.0		8.9		100.0
정치개혁	8.0	12.4	29.2	10.2	2.2	16.8		19.7	1.5	100.0
경제성장	1.2	5.4	67.9	7.3	.8	13.1	.0	2.6	1.7	100.0
국제경쟁력강화	.8	17.2	48.4	9.0	2.5	14.8		5.7	1.6	100.0
삶의질개선	7.5	17.8	28.1	8.9	1.4	7.5	.0	18.5	10.3	100.0
국가안보강화	9.5		14.3	9.5		33.3		9.5	23.8	100.0
Total	4.8	11.5	45.8	12.8	1.2	14.3	.1	7.1	2.5	100.0

*출처: 정한울 (2008), 〈표 2〉 인용

우선과제로 꼽았을 것이다. 2위로 꼽은 경제성장에 대한 실현 기대를 논외로 한다면, 경제 양극화 해소에 관한 한 조사의 오차범위를 고려할 때 이명박 후보와 정동영 후보는 무차별적인 대안으로 인식했다고 해석해도 될 것이다.

그리고 2008년 4월 18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46.1%의 유권자만이 투표에 참여했고, 그 이후에는 한-미 소고기 협상을 계기로 연일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다. 기존 정당체제 내에 있는 대안들이 무차별적인 조건에서, 혹은 최선의 대안이라고 인식했던 대안이 정책기대를 배반했다고 느낄 때 이 유권자 집단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물론 유권자 집단과 소통하면서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정치엘리트의 능력의 가능성이 새로운 대안을 다시 찾게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만약 그런 가능성조차 실현되지 않을 때, 유일하게 남은 가능성은 정당체제 자체에 대한 지지철회가 될 수 있다.

최선의 대안에 대한 기대, 혹은 무차별적 대안 가운데 최선의 선택이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경험은 특히 1997년 이후 반복적인 것이다. 어떤 선택을 했든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다수 유권자들의 지위는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 객관적인 경제, 고용지표들로 확인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미 선거불참은 특정 유권자 집단 내 일부의 선택이 되고, 반복되면서 확대되어 집

단적 선택의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만약 그러하다면, 한국 정당정치가 당면한 과제는 투표참여 유권자의 선호를 결집하고 그 가운데 우선순위에 따라 정책으로 실현하는 일상의 문제가 아닌, 다른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투표불참 유권자가 ‘누구’ 인가를 밝히는 것은 더 이상 원자화된 개별유권자의 선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 체제적 차원의 문제일 수 있다는 인식이 본 논문의 출발점이다.

II. 집합 데이터로 본 투표불참 유권자 집단의 성격: 서울

우선 17대 대선과 18대 총선의 기록적인 투표율이 특정 인구집단의 집단적 투표불참의 결과로 가정할 수 있는지를 집합데이터를 사용해 확인해 보았다. 만약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인구집단의 투표불참의 결과로 가정할 수 있다면, 적어도 1)사회경제지표와 투표율은 상관성을 보일 것이고, 2)특히 17대 대선과 18대 총선이 각각 그 이전 선거에 비해 낮아진 투표율의 편차 또한 사회경제지표와 상관성을 보일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4~5년 내에 발생한 투표율의 급격한 하락이 시장에서의 존재조건의 변화를 집단적으로 반영한 것이라면, 투표율의 하락편차 또한 사회경제지표와 상관성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일단 대상지역은 서울로 한정하였다. 지금까지 전국적 선거 투표결과와 개별 설문조사 결과에서 밝혀진 바는 여전히 ‘지역’ 변인이 다른 변인의 영향력을 압도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의 주요 관심사인 사회경제적 변수의 영향력을 보다 투명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지역 변인의 영향력이 약하다고 검증된 서울지역을 조사하였다. 사회경제지표로는 2004년 기준 서울특별시에서 제공하는 각 구별 자치구 세입예산액 자료를 사용하였다.²⁾

2) 서울특별시 제공 구별 자치구 『2004년도 세입예산액』 자료는 박철희(2005), p.318 <표 1>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사용했다. 박철희의 논문은 이 밖에도 본 논문의 고민을 발전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표 3〉 17, 18대 총선 투표율과 구별 자치구 세입액

	17대 총선 투표율(%)	18대 총선 투표율(%)	2004년 세입액(백만 원)
강북구	59.1	42.9	40,630
금천구	59.9	44.0	42,935
은평구	60.0	47.2	49,443
중랑구	57.9	43.5	51,785
성동구	61.8	46.5	53,129
도봉구	62.0	47.7	55,322
광진구	61.3	43.8	55,417
관악구	61.5	44.8	60,662
동대문구	62.6	46.3	61,304
강동구	63.0	44.1	61,897
노원구	64.6	50.9	63,315
서대문구	63.1	46.3	63,702
구로구	63.9	48	66,188
마포구	62.1	45.2	68,135
양천구	63.8	45.7	69,822
동작구	64.0	52.8	72,188
성북구	60.8	44.3	77,050
용산구	61.2	43	88,229
강서구	61.5	44.8	89,107
종로구	64.0	52.2	102,241
영등포구	63.3	45.6	124,932
송파구	63.4	44.1	153,542
중구(서울)	61.9	48.3	154,611
서초구	64.6	45.6	167,878
강남구	61.7	42.3	284,013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지역의 평균투표율은 45.8%이며, 이 수치는 2004년 17대 총선 이 지역 평균 투표율 62.2%보다 16.4%가 하락한 것이다. 다음의 〈표 3〉은 자치구별 2004년도 세입액 순위에 따라 17대 총선과 18대 총선

〈표 4〉 17, 18대 총선 투표율과 자치구 세입액 상관성 비교

		17대 총선 투표율	18대 총선 투표율	18~17투표율 차
자치구 세입	Pearson 상관계수	0,262	-0,151	0,381
	유의확률(양쪽)	0,206	0,473	0,060
	N	25	25	25

투표율을 기록한 것이다.

이상의 자료를 토대로 각 선거 투표율, 그리고 양 선거의 투표율 차이가 자치구 세입액과 상관성을 가지는지를 검토한 것이 〈표 4〉다. 〈표 4〉에 따르면, 투표율 및 투표율 편차는 모두 자치구 세입액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율 및 각 정당의 지지도는 선거구별 후보경쟁구도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황아란 1997; 류재성 2008). 특히 18대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 이전부터 정당지지도 지표로 확인되었듯이, 투표율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는 박빙의 경쟁구도와는 거리가 멀었다. 선거구 경쟁구도가 투표율 하락에 미친 영향력이 무차별적이지 않고 특정 인구집단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투표율 편차와 자치구 세입 예산액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0.381의 관계를 나타냈다.

이번에는 선거구별 경쟁구도에서 자유로운 대통령 선거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16대, 17대 대통령 선거와 양대 선거 투표율 편차가 자치구 세입액과 갖는 상관관계를 살펴본 것이 〈표 5〉의 결과다.

〈표 5〉 16, 17대 대선 투표율과 자치구 세입액의 상관성 비교

		16대 총선 투표율	17대 총선 투표율	17~16투표율 차
자치구 세입	Pearson 상관계수	0,135	0,462	-0,643
	유의확률(양쪽)	0,520	0,020	0,001
	N	25	25	25

16대 대선의 각 자치구별 투표율은 자치구 세입액과 유의한 상관성이 없었지만, 17대 대선 투표율과 양대 선거 투표율의 편차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자치구 세입액이 낮은 자치구일수록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로 16대 대선에 비해 17대 대선에서 투표율 하락폭이 크게 나타난 것은, 17대 대선의 어떤 원인이 무차별적인 투표를 하락이 아닌 인구집단에 따른 불비례적인 투표를 하락을 야기했다는 가정을 성립하게 한다.

집합데이터로 개별유권자의 투표결정의 원인을 증명할 수는 없지만, 17대 대선이 불균형적인 투표를 하락을 초래했다면 가정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요인은 선거경쟁구도가 될 것이다. 선거구의 사회경제적 상황이 선거결과와 갖는 상관성을 분석한 박철휘(2005)의 연구는,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세입액이 높은 자치구일수록 한나라당 당선자의 숫자가 많은 반면, 낮은 자치구일수록 열린우리당 당선자 숫자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어떤 이유에서였든 17대 총선에서는 자치구별 사회경제적 상황과 적어도 당선자 비율에서는 높은 관련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16대와 17대 대통령 선거경쟁구도의 차이와 투표율 하락과 갖는 상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양 선거의 후보지지율과 자치구 예산액의 상관관계를 표시한 것이 <표 6>이다.

<표 6>에 따르면, 16대 대선에서 세입액이 낮은 자치구일수록 노무현 후보 지지율이 높았던 반면, 높은 자치구일수록 16대 대선 이회창 후보 지지율과 17대 대선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이 높았다. 그리고 16대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이 높았던 자치구일수록, 17대 대선에서 투표율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다. 16대 대선 노무현 후보 지지율과 17~16대 투표율 편차의 상관계수는 0.840(유의수준 0.000)이다.

<표 6> 16, 17대 대통령 선거 지지율과 자치구 세입액 상관성 비교

		16대 이회창 지지율	16대 노무현 지지율	17대 이명박 지지율
자치구 세입	Pearson 상관계수	0.825	-0.813	0.798
	유의확률(양쪽)	0.000	0.000	0.000
	N	25	25	25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16대 대선에서는 후보지지도에서는 자치구 세입액과 유의한 상관성이 발견되었지만 투표참여 여부와는 관련이 없었던 반면, 17대 대선에서는 후보지지도와 함께 투표참여 여부, 특히 양대 선거 투표율 하락 폭과 자치구 세입액 규모는 유의한 상관성을 나타냈다. 세입액이 낮은 자치구 유권자일수록 16대 선거에서는 노무현 후보를 지지했으나, 17대 선거에서는 투표불참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특히 어떤 유권자 집단에서 이런 선택의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는가? 이하에서는 개별유권자 조사 데이터를 사용해 사회계층 집단에 따른 투표참여 패턴을 살펴보겠다.

III. 개별유권자 조사 데이터로 본 투표불참 유권자 집단의 성격: 전국

본 연구가 사용하는 개별유권자 조사 데이터는 17대 대통령 선거 예측을 위해 조사된 YTN-한국리서치의 조사 자료다. 응답자 표집은 지역, 성, 학력, 직업, 소득, 연령별 대표성을 기준으로 사전에 구축한 8,112명의 패널 중 신뢰도 조사를 거쳐 진행되었으며, 표본의 크기는 총 5,500개이고, 조사방식은 선거당일 휴대폰 조사로 이루어졌다. 응답률은 98.9%이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투표참여를 기준으로 보면, 유효 응답 5,443개 중 조사마감 시간인 5시 20분 기준 '투표했다'는 응답은 71.2%인 3,874개, '아직 안 했다' 혹은 '투표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은 28.8%인 1,569개다. 이하에서는 전자를 투표참여집단으로, 후자를 투표불참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앞서 전제했듯이 본 논문의 관심은 상이한 사회계층 집단, 특히 직업집단과 소득을 기준으로 투표참여 패턴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가에 관한 것이다. 본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성, 연령, 학력, 소득 변수가 투표참여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전체 데이터를 대상으로 소득집단 분류에서 가장 설명력이 큰 범주집단을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한 결과가

〈표 7〉 투표참여 패턴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소득분류 1)

	B	S.E.	Wald	자유도	유의확률	Exp(B)
성	0.129	0.062	4.331	1	0.037	1.138
연령	-0.267	0.026	102.414	1	0.000	0.765
학력	-0.179	0.072	6.117	1	0.013	0.836
가구소득1	-0.088	0.022	15.620	1	0.000	0.915
상수	0.452	0.213	4.509	1	0.034	1.572
R ² =0.031, 유의확률=0.000, 자유도=4						

〈표 7〉~〈표 9〉이다.

〈표 7〉은 1차로 남/여, 10단위 연령 구분, 고졸을 기준으로 한 2개의 학력집단, 100만 원 단위 6개 소득집단(1~99만 원, 100~199만 원, 200~299만 원, 300~399만 원, 400~499만 원, 500만 원 이상)을 독립변수로 투표여부에 대한 설명력을 확인한 것이다. 〈표 7〉의 결과에 따르면, 여성일수록, 연령, 학력, 소득이 낮을수록 투표에 불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소득 변수는 0.001수준에서, 성과 학력 변수는 0.05수준에서 유의하다. 연령이 낮을수록, 여성일수록 투표율이 낮은 것은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관된다. 반면 고학력 유권자들일수록 투표율이 낮았던 기존 연구결과들을 고려할 때, 저학력 유권자들일수록 투표율이 낮은 이번 조사의 결과는 특징적이다. 또한 소득변수는 계수 값이 가장 작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7〉에서 소득변수의 각 급간별로 투표여부를 확인하는 교차분석 결과, 200만 원 단위 급간에서 투표율의 차이가 두드러졌으며, 특히 200만 원 미만 집단에서의 투표율과 이상 집단에서의 투표율 차이가 10% 이상 차이가 났다. 이 결과를 반영하여 200만 원 미만, 200~400만 원 미만, 400만 원 이상의 3급간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8〉이고, 200만 원을 기준으로 이상과 이하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가 〈표 9〉다.

가구소득의 B계수 값은 〈표 7〉에서 -0.088, 〈표 8〉에서 -0.182, 〈표 9〉에서 -0.383으로 높아져, 200만원을 기준으로 한 양 집단 분류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표 8〉 투표참여 패턴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소득분류 2)

	B	S.E.	Wald	자유도	유의확률	Exp(B)
성	0.130	0.062	4.364	1	0.037	1.138
연령	-0.265	0.026	101.616	1	0.000	0.767
학력	-0.181	0.072	6.265	1	0.012	0.835
가구소득2	-0.182	0.046	16.015	1	0.000	0.833
상수	0.501	0.217	5.334	1	0.021	1.650
R ² =0.031, 유의확률=0.000, 자유도=4						

〈표 9〉 투표참여 패턴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소득분류 3)

	B	S.E.	Wald	자유도	유의확률	Exp(B)
성	0.129	0.062	4.336	1	0.037	1.138
연령	-0.278	0.027	109.564	1	0.000	0.757
학력	-0.189	0.072	6.890	1	0.009	0.828
가구소득3	-0.383	0.073	27.888	1	0.000	0.682
상수	0.863	0.240	12.956	1	0.000	2.371
R ² =0.034, 유의확률=0.000, 자유도=4						

〈표 10〉 직업집단별 소득에 따른 투표패턴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소득분류1)

	빈도	B계수값	유의확률
농/임/어업	219	-0.013	0.920
자영업	633	0.088	0.184
판매/영업/서비스직	593	-0.058	0.376
생산/기능/노무직	735	-0.085	0.161
사무/관리/전문직	995	-0.112	0.038
주부	1,292	-0.100	0.022

특히 200만 원 기준 양집단 소득분류 틀을 사용할 경우, 소득 변수는 다른 사회 인구학적 배경요인과 비교할 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각 직업집단별로 소득에 따라 투표패턴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먼저 100만 원 단위 6개 소득 급간으로 각 직업집단 별 투표패턴의 차이가 있는지를 로지스틱 회귀분석한 결과가 <표 10>이다.

100만 원 단위 6개 급간으로 조사한 결과, 사무/관리/전문직과 주부 범주에서만 0.0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부의 관계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농/임/어업, 자영업 집단에서는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정의 관계가 발견된 반면, 판매/영업/서비스직, 생산/기능/노무직에서는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부의 관계가 발견되었다. <표 11>은 200만 원 단위 소득분류(소득분류 2)와 200만 원 기준 양집단 분류(소득분류 3)에 따른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소득분류 2에서는 농/임/어업과 자영업 집단을 제외하고 모두 부의 관계를 보였으며, <표 10>과 마찬가지로 사무/관리/전문직과 주부 집단에서만 0.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소득분류 3에서는 생산/기능/노무직에서 0.05수준에서 유의한 부의 관계가 나타난 반면, 사무/관리/전문직과 주부 집단에서 유의확률이 대폭 낮아졌다. <표 10>과 <표 11>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농/임/어업 집단의 경우 소득분류 구분에 따라 정의 관계와 부의 관계가 일관되지 않는다. 그리고 자영업 집단은 일관되게 정의 관계지만 유의확률이 크게 낮다. 이런 이유로 이 두 집단을 제외하고 나머지 직업집단을 모두 하나의 범주로 구분

<표 11> 직업집단별 소득에 따른 투표패턴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소득분류2, 3)

	소득분류 2		소득분류 3	
	B계수값	유의확률	B계수값	유의확률
농/임/어업	0.178	0.516	0.281	0.444
자영업	0.094	0.490	0.109	0.653
판매/영업/서비스직	-0.109	0.399	-0.388	0.069
생산/기능/노무직	-0.176	0.141	-0.414	0.015
사무/관리/전문직	-0.223	0.037	-0.365	0.088
주부	-0.202	0.028	-0.219	0.109

〈표 12〉 농/임/어업, 자영업 집단을 제외한 직업집단의 투표패턴 분석

소득분류 1		소득분류 2		소득분류 3	
B계수 값	유의확률	B계수 값	유의확률	B계수 값	유의확률
-0.079	0.002	-0.162	0.002	-0.291	0.001

하여 소득분류에 따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해 본 것이 〈표 12〉다.

〈표 12〉에서는 〈표 7〉~〈표 9〉와 마찬가지로 가구소득 200만 원 기준 양 집단 분류가 가장 높은 유의확률에서 가장 큰 B계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은 판매/영업/서비스직, 생산/기능/노무직, 사무/관리/전문직, 주부 집단을 대상으로 다른 사회인구학적 변수들과 소득의 영향력을 검토한 것이다.

〈표 13〉의 결과에서 투표참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소득변인이며, 연령 변인의 영향력보다 그 크기는 더 높게 나타난다. 전체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했던 〈표 9〉와 비교할 때, 성별 변인은 〈표 13〉에서 유의미하지 않았고, 소득 변인의 영향력은 더 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할 때, 판매/영업/서비스직, 생산/기능/노무직, 사무/관리/전문직, 주부 집단에서는 소득이 낮을수록, 특히 200만 원 미만 집단일수록, 연령과 학력이 낮을수록 투표에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표 13〉 직업집단의 투표패턴에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미치는 영향

	B	S.E.	Wald	자유도	유의확률	Exp(B)
소득분류3	-0.485	0.091	28.492	1	0.000	0.616
성	0.088	0.077	1.320	1	0.251	1.092
연령	-0.313	0.034	87.230	1	0.000	0.731
학력	-0.187	0.085	4.865	1	0.027	0.829
상수	1.226	0.289	18.045	1	0.000	3.406

$R^2=0.040$, 유의확률=0.000, 자유도=4

IV. 투표불참 집단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한국 정당체제

‘누가 투표하지 않는가’에 관한 II절과 III절의 결과는,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저소득층 유권자 집단일수록 투표불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특히 200만 원을 기준으로 한 소득집단 구분은 전체 인구집단과 판매/영업/서비스직, 생산/기능/노무직, 사무/관리/전문직, 주부 집단에서 각각 성, 학력, 연령 변수보다 더 큰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현재 우리사회의 고용구조와 대체로 부합한다. 조사 데이터의 조건상 직업집단을 더 세분화할 수가 없었지만, 대체로 저소득층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이 분포한 직업군에서 소득에 따른 투표불참의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2007년 기준 전체 고용인구 가운데 55.8%가 비정규직 형태로 고용되어 있고, 비정규직 노동자 4명 중 3명이 단순노무직, 서비스직, 기능직, 사무직, 판매직 5개 직종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서비스직(82.7%), 판매직(87.7%), 단순노무직(86.8%)은 10명 중 8~9명이 비정규직이다(김유선 2008).

2007년 3월 기준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액은 정규직 노동자 월평균 임금액 238만 원의 50.5%인 120만 원 수준이다(김유선 2008). 역시 데이터의 특성상 가구소득 규모를 더 세분화할 수 없었지만, 200만 원을 경계로 특히 투표참여 집단과 불참 집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 것은 시장에서의 고용구조와 정치참여의 집단 간 차이가 연계되어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을 가능하게 한다.

위 조사 결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집단 간 차이가 바로 투표참여 집단과 불참 집단으로 연계된다고 확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소득이 낮을수록 투표불참 확률이 높다는 것은, 개별 유권자의 불참이유를 따지기 이전에 정당체제가 전체적인 소득 분포를 불균등하게 대표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특정 인구집단, 특히 사회경제적인 배경을 갖는 인구집단이 정당체제에서 집단적으로 낮게 대표된다는 것은, 선거정치와 정당정치를 항상적으로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무차별적으로 흩어져 있는 개인이 아닌, 특정 집단에 몰려 있으면서 대표되지 않는 유권자들은 언제든지 계기가 있으면 비제도적인 방식으로 요구를 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 측면에서 볼 때에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민주주의는 시장에서의 불균등한 자원배분을 견제하고 완화시킴으로써, 정치공동체의 각 집단들이 균형을 가지며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체제다. 시장 메커니즘에 따른 자원배분에서 필연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집단들이 정치와 민주주의 제도를 통해서도 대표되지 못한다면, 그 민주주의의 질은 낮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정치체제의 안정성을 담보하고 한국 민주주의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소득 유권자 계층이 투표할 수 있는 정당체제와 선거제도가 필요하다. 그 집단이 왜 투표하지 않았는지를 분석해서 대안을 만들고 다시 투표하도록 만드는 것은, 17대 대선과 18대 총선에서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집단의 선호를 대표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정당체제의 과제일 수 있다. 이 문제는, 전체 유권자의 46.1%만이 투표에 참여한 18대 총선의 결과가 다음 대 선거에서 반복되고 고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며, 낮은 투표참여에 기초해서 구성된 현직 정부가 현재 겪고 있는 정치 불안정에서 보듯이 정치체제의 불안정성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참고문헌】

- 강경태. 2003. “한국 대통령 선거 어떤 유권자가 참여하나? 선거관심도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7집 제1호, 2003, 5.
- 강원택. 2002. “투표 불참과 정치적 불만족: 기권과 제3당 지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제2호, 2002, 7.
- 김 욱. 1998. “투표참여와 기권: 누가, 왜 투표하는가.” 이남영 편. 『한국의 선거 II』, 197-254. 서울: 푸른길.
- 김유선. 2007. “2007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부가조사(2007.3) 결과.” 『노동사회』 2007년 12월호 통권 127호.
- 류재성. 2008. “지역구 선거경쟁과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제14-18대 총선.” 한국정치학회 2008 춘계학술회의 발표논문, 2008/6/1. 한국정치학회 홈페이지 다운로드.
- 박철휘. 2005. “사회경제적 구조전환의 관점에서 본 4·15 총선.” 박찬욱 편.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 분석』. 서울: 푸른길.
- 이남영. 1993. “투표참여와 기권.” 『한국의 선거 I』, 21-47. 서울: 나남.
- 이현우. 2008. “투표율 하락의 교훈.” 동아시아연구원 2007 대선 패널조사 언론보도자료, 2008/6/1. 동아시아연구원 홈페이지 다운로드.
- 정한울. 2008. “경제는 어떻게 투표에 영향을 미치나?” 동아시아연구원 2007 대선 패널조사 언론보도자료, 2008/6/1. 동아시아연구원 홈페이지 다운로드.
- 황아란. 1997. “선거구 특성이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제30집 제4호, 1997, 2.
- 조성대. 2006. “투표참여와 기권의 정치학: 합리적 선택이론의 수리모형과 17대 총선.” 『한국정치학회보』 제40집 제2호, 2006, 6.
- Schattschneider, E. E. 1975. *Semisovereign People: A Realist's View of Democracy in America*. Reissued with an Introduction by David Adamany, The Dryden Press, Hinsdale, Illinois.
- Teixeira, Ruy A. 1992. *Disappearing American voter*. Washington, D. C.: Brookings Institution.
- Bennet, Stephen Earl, and David Resnick. 1990. “Implication of Nonvoting of Democracy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4, 771-89.

원고접수일: 2010.03.16

심사완료일: 2010.04.10

[ABSTRACT]

Voting Nonparticipation Group and Korean Party System

Seo, Bok-kyeung | Sog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socioeconomic differences of the voting participation group and the nonparticipation group in 2007 presidential election and 2008 National Assembly election. The main concern of this paper is not why they did not vote but who did not vote because of the recently sharp declines of voting turnout in national elections of Korea. The one explanation for the effect of the nonvoting behaviors is to be indifferent to the party system if there are not the differences of their demographical characteristics. But if the differences of their demographical characteristics are, the voters' nonparticipation behaviors can influence the representativeness of the party system.

The key finding are as follows. In the collective level, as the district revenue is the lower, the decline of voting turnout in the recent elections is the bigger in Seoul. Next in the individual level, the lower income voters less participate in voting than the higher income voters in 2007 presidential election. This result means the Korean party system represents the income-based constituencies unequally.

Key Words | voting participation, voting nonparticipation, abstention, the representativeness of the party system